

투데이 칼럼

죽음을 강요하는 관행,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은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으로 확산되어 큰 피해를 남겼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은 더딘 진화에 고 통스러웠고,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지역 주민은 안타까움에 힘겨웠다. 더욱이 이번 산불은 자연재해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인재(人災)로 불 수밖에 없는 사망사고로 인해 더욱 가슴 아픈 비극으로 남았다.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4명은 산불 진화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임용 4년 차 녹지직 공무원 강씨는 당직이 아니었으나 동료를 위해 당직을 바꿔주고 산불진화대원을 인솔해 현장으로 출동했다가 돌아오지 못했고, 함께 변을 당한 산불 진화대원 3명은 모두 60세 이상 고령으로 예방진화대였지만 긴급한 상황에 방화복과 기본 장비만을 갖춘 채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들의 평소 임무는 산불 감시와 같은 예방 활동이며, 산불 발생 시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등을 담당한다. 사용하는 삼, 갈퀴, 소형 펌프 등 수동 도구 위주인 장비만 보더라도 그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부족한 인원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미명 아래, 이들은 사실상 죽음의 위험에 내몰렸다.

산불은 당일 기상 상황이 주 변 환경 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그 규모가 순식간에 확대될 수 있다. 사고를 당한 분들이 출동한 당시 현장은 강풍과 역풍으로 불길의 순식간에



고 경 운
정읍시의회 의원

확산되던 위험지역이었다고 한다. 이번 산불의 이동속도가 시간당 8.2km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속초·고성 산불의 5.2km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국내 산불 사상 최고 속도라고 한다. 가늠지 못할 위력이다.

이번 산불로 한계가 드러났지만, 본래 산불의 주불(主火) 진압은 산림청 직속의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산불 진화헬기와 협업해 집중한다. 측면 화재 확산 방지 및 방화선 구축 등도 함께 담당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해 대형 산불 시 관할 지역 외라도 신속히 투입되어 전국 단위 운영도 가능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불 전문 소방관도 주불 진화에 참여한다.

안타까운 점은 이번 산불 이후 일각에서 나오는 지자체 소속 담당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의 전문성이나 훈련 부족을 문제 삼는 목소리다. 정 말일까?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제 그것들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면 관련 교육과 훈련의 강화는 필요

하다. 그러나 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 없이 전문성이나 훈련 부족을 논하는 합정도 함께 경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견딜 수 없는 교통과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던 대형 화재들의 경험이었다. 그런 비극에서 봐 왔듯이 무고한 희생의 원인은 교육이나 훈련 부족보다는 관행이나 시스템의 부재인 경우가 더 많았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투입해야 한다는 관행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잔혹하다.

감히 상상하자면, 변을 당한 창녕군의 직원들도 맹렬한 화마 앞에 분명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봉사자로서 그것을 두고 차마 돌아설 수 없는 책임감도 함께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고 결국 희생되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개인의 무고한 희생을 미덕으로 여겨서 안 된다. 당연히 이번 사고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송고한 희생은 애도해야 하고 기억되어야 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일하라는 관행을 결코 더 이상 영웅담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관행은 앞으로도 계속 무책임 뒤에 숨은 채 침묵하며 희생을 방조할 것이다. 발생할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도 절대 도움되지 않는다. 이제 필요한 건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비하는 것이다.

산불 발생 시 실시간 기상, 산불 발생 지역의 지형 분석, 불길 확산 예측을 통해 상황에 맞는 인력과 자원의 투입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AI와 드론을 활용해 진화 불가능 지역을 사전에 식별하고, 해당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인력 투입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현재 산불 대응은 지자체, 산림청, 소방청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기적 협력 체계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중앙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모든 인력과 장비를 일원화해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번 사고는 "일단 진화하라"는 압박 때문에 안전이 무시된 결과이다. 그래서 인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갈퀴와 등짐펌프를 든 사람이 시간당 8km로 번지는 불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

공직자이기 이전에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희생의 서사로 끝나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을 시작하기 전 금지구역 정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경고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금지구역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는 물리적 표지판 설치 역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드론은 창의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술이다. 하지만 그 사용은 항상 규정 준수와 공공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젊은 사용자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공공 안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기관, 사용자 모두가 협력해야 할 때이다. 드론 사용자의 철저한 확인과 정부 기관의 명확한 정보 제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 재 경
김제경찰서
해린파출소장

앱의 실시간 경고 시스템이 미흡하면 사용자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 사용자들은 비행 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정부와 기관은 더욱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드론 사용

사설

노인 단체 사칭 범죄

노인 단체 등을 사칭한 범죄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들 범죄 단체들은 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을 파고든다. 처음에는 "가입하시면 매달 돈 드려요"라는 식으로 접근한다.

유명 방송사까지 사칭해 노인을 속이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최근 정부의 노인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단체를 가장해 노인의 자금을 편취하려는 불법업체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복지 공백에 놓인 장년과 노년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노인 공동체 사업 조합의 복지 정책을 악용해 공공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단체가 등장했다.

이들은 원금 보장과 함께 일 자리를 지원하고 장려금을 해 월 지급하겠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노인들은 가입 과정에서 개인 정보와 함께

예탁금 입금을 요구받아 피해에 노출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노년층이 유튜브 등 SNS에 취약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이들은 거짓 뉴스 영상과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자신들을 합법적인 공공단체처럼 홍보하고 있다.

유명 방송사를 사칭한 유튜브 계정에서 실제 뉴스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해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뉴스와 블로그에 다수 댓글을 조작하기도 한다.

원금 및 고수의 지급을 보장하는 유사 수신 행위는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노년층 등 금융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경계 메시지가 절실하다.

정부의 복지 사업은 국민복지 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 등 홈페이지 도메인 표기법은 'go.kr' 또는 'or.kr' 인 점도 인지해야 한다. 노인 단체를 사칭한 범죄 행위를 일벌백계하기 바란다.

흔들체조 봉사단의 건강증진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소속 흔들체조 봉사단이 어르신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봉사단은 2019년 5월부터 전북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흔들체조와 근육테이핑, 말벗 상담 등 봉사를 하고 있다.

단원은 대학교수, 중고등학교 교사, 공무원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70~80대 초반의 남성 18명, 여성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손흥운 단장이 교육했던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아카데미에서 흔들체조를 배우다 뜻이 맞아 봉사단을 조직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두 번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한 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서머한 분위기를 재미있는 마술 등으로 부드럽게 바꾼다. 이어 손 단장의 시범에 따라 어르신들이 방바닥에 누워 흔들체조를 한 동작씩 따라한다.

흔들체조는 모두 13~15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 후 방바닥에 반드시 누워 두 무릎을 세운 다음 다리를 양 옆으로 살살 흔들다. 이어 팔, 어깨, 허리 등 온몸 전체를 천천히 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이어간다.

다른 한 쪽에서는 '키노시오 테이핑' 이른바 '근육테이핑'을 해준다. 무릎, 손목, 발목 부위에 테이핑을 해주면 국소적으로 교여 있던 조직액, 림프액 등의 흐름이 원활해져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칭을 통해 굳어진 근육을 풀어 관절 건강과 부상 예방에도 크게 도움을 준다. 누워서 발바나 들지 못하던 어르신은 흔들체조를 꾸준히 한 뒤부터 두 발을 올리고 내리기를 10회씩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봉사단은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2024년 노인자원봉사대축제'에서 대한노인회장상을 수상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드론 사용자와 정부의 협력, 금지구역 문제 해결의 열쇠

드론은 우리의 삶에 창의성과 즐거움을 더해주는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바다 풍경을 담거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록하려는 젊은 세대에겐 드론은 매력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바로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사례들이 다.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비행금지 구역을 관찰하며 목격한 현실은 더욱 씁쓸하다. 많은 젊은이들이 단순히 아름다운 해수욕장의 바다 풍경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지만, 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단속의 대상이 되

는 일이 빈번하다. 이들은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얻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정보 접근성의 문제로 연결된다.

드론 사용자의 책임은 분명 중요하다. 비행 전에 철저히 규정을 확인하고 안전한 비행을 계획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 역시 금지구역임을 사용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책임이 있다. 현재 제공되는 드론 비행 관련 앱과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금지구역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정보가 충분히 직관적이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물리적 경고 표지판이 부족하거나



김 재 경
김제경찰서
해린파출소장

앱의 실시간 경고 시스템이 미흡하면 사용자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 사용자들은 비행 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정부와 기관은 더욱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드론 사용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